

● **친환경농산업 발전저해 요인분석에 따른 제도개선 정책건의**



격동의 병신년에 우리 친환경농산업계는 “부가세영세율 적용확대”라는 성과를 거뒀다. 더 오동치는 정유년 한해가 예상되는 시점에 민주연구원(민주당 싱크탱크)의 친환경농산업분야 대선공약 제출요청이 있어 친환경농산업 문제를 분석 다음 제도개선 방안을 작성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각당에 보낼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친환경농산업 정책건의 제안**

**(건의 1)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예산확대**

친환경농산업의 현실 ('12)7.3%를 정점으로 ('16) 4.5%로 급격 하락추세로 전환  
친환경농업/자재산업 위기 : 무농약전환 친환경농자재 실천수단결여. 농가경영비 상승, 농식품 수입 증가 등 대내외적 위협요인 직면 특단의 육성대책 필요

○ 저농약 인증폐지에 따른 무농약 전환 대책 마련 : 작목별 재배 난이도를 고려한 차등적 직불금 인상 및 친환경 보험제도 도입

○ 친환경유기농자재 지원예산 확대 : ('17) 31억→('18) 100억원

※ 너무나 적은 지원 예산때문에 농민들끼리 분쟁만 조장하므로 확대필요

○ 친환경유기농자재 가격이 비싸다는 민원해소 : 유기농자재 시후관리 비용 (150만원정도)을 정부예산으로 지원종전 없던 공시 수수료가 민간 인증기관으로

넘어 가면서 건당 400만원이 생겨 이를 농민에게 전가하기 때문.

**(건의 2) 수입농산물 증가대비 유기식품 국산원료 확보 유기농자재 수출확대 지원시급**

- 한류에 힘입어 유기농식품/자재는 중국 등 동남아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
- 적극적 수출 확대 방안과 국산원료 확보방안 마련이 요구됨.
- 유기농자재를 농식품 수출정책지원대상에 포함 적극적 수출 지원

**(건의 3) 인증제도를 규제·분석 중심에서 과정 중심의 선진국체제로의 전환 필요**

- ① 분석에 의존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탈피 과정중심 시스템인증으로 전환
- ② 유기농업자재중 잔류농약 허용기준 조속 설정, 검사대상성분 투명하게 고시
- 현 유기농업자재 및 친환경비료중 농약검사기준은 분석시 정량한계만 정해 놓고 기준 초과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허용기준이 없어 식품첨가물기준 5ppm 적용
- ③ 국회 계류중인 비료관리법개정안 개악 초래우려→ 제26조 위임조항(농진청) 유지
- ④ 친환경농자재개념 재정립
- (현행)유기농자재→ 제4종, 미량복비, 완효성 포함 GAP 및 친환경농산물 사용허용

**(건의 ④) 유기 종자 및 투입 유기자재 R&D 연구지원 확대 현장연구 강화**

- 유기농자재들이 검증 체계화미흡, 소량 생산되어 비싸고 효과도 미흡하다는 농업인 불만 점증. 친환경 실천에 필수적인 병해충관리 및 양분공급용 고효율 저비용 유기농자재 R&D 지원을 강화, 효과가 우수하면서도 값도 싼 검증 제품이 많이 개발되도록 품질 우수제품 지원 강화

**[중장기 친환경농업육성 목표 및 비전]**

- 소비자 신뢰에 기반한 친환경농산물/자재 인증 및 안전관리
- 고품질 저비용 친환경농자재 개발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반구축
- 유기가공식품/유기농자재 수출전용 품목개발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 친환경 인증/자재비용 지원확대로 친환경농가 비용부담 완화
- 저농약 폐지대안 친환경농법/자재 적극보급 무농약 전환 실천대책 강구

## ◎ 2017 농식품부 친환경농업정책 추진계획

농식품부는 12월 친환경농업관련기관 간담회에서 발표한 2017년도 친환경 농업 추진목표로 △친환경인증제도 개선 △소비채널 다양화 △식품산업 연계 △친환경 농가 경영 안정 △친환경 쌀 생산·수요 확대 등을 발표했다.

※친환경농업육성법령 개정수요도 추가로 접수중이니 의견개진 요망

- ① **인증제도 개선** : 현재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원화돼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함과 동시, 6월부터 인증기관 평가·등급제를 도입. 또한 '친환경안심유통시스템' 통해 실시간 인증정보 등을 제공.
- ② **소비채널 다양화** : 학교급식의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농식품의 시장규모를 확대시킨다. 특히 2015년 기준 친환경농산물 소비의 약 31.5%를 점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원료공급체계 구축과 연 400억원대 원료 구입 비용 확대, 영양사·학부모·학생 등 급식관계자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 ③ **식품산업 연계**: 그 동안 유기원료 함량 비율이 95% 이상인 제품에 대해서만 인증하던 것을 무농약 원료 사용 제품까지 인증 범위를 확대. 미국·EU 등과 체결한 '유기가공식품 동등성협정'을 일본·캐나다 등 수출 유망국으로 확대.
- ④ **친환경 농가 경영안정** : 직불금 지급품목을 기존 2품목(논, 밭)에서 곡류(유기농 90만원, 무농약 60), 채소·특작(유기농 130, 무농약 110), 과수(유기농 150, 무농약 130) 로 나눠 지급방식을 변경. **친환경 인증비용과 자재비용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을 강화.** 현 시·도별로 50~100%씩 차등지원 방식에서, 일괄적 국비 30%, 지자체지원 50%, 농민자부담 20% 방식으로 변경.

## ◎ 친환경소식

**1. 친환경인증 4년만에 5.8% 증가, GAP농가수도 20% 늘어**  
**-부실인증건수 감소, 유기농자재중 농약검출 전무, 소비자만족도 향상-**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수(호)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ha;농관원자료)

▶ 농식품부가 2016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과 인증 농가수가 2015년 대비 각각 5.8%, 3.2% 증가한 7만9,479ha, 6만1,946호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특히 유기농가수가 1,285호로 두배 늘었음.

▶ 2012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였던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이 4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 양상을 보여, 농식품부에선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친환경 농업계는 수치 반등에 대해, 일시적 현상인지 더 두고 볼 일이며, 친환경농산물 판로 개척 및 소비 확대를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임.

▶ 유기인증농가/면적: ('13) 14천호/21천ha → ('14) 12/18 → ('15) 12/18 → ('16) 13/20

▶ 무농약 인증농가/면적 : ('15) 48천호/5만7천ha → ('16) 49/60

▶ GAP 인증농가/면적 : ('14) 46천호/58천ha → ('15) 65/54 → ('16) 87/75

▶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건수: ('13)5,659건 → ('14)6,411 → ('15)3,126 → ('16)2,727

▶ 유기농자재 중 잔류농약검출건수(전체적발건수/농약검출건수)

('13) 57건(14건) → ('14) 57(19) → ('15) 53(1) → ('16) 27(0) \*632점검사 농약 불검출

▶ 또한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2015년 64%에서 지난해 68%로 3.3% 올라, 3년 연속 상승 전체적 지표가 양호해 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향후 의무자조금과 연계해 친환경농산물 신뢰확산 교육·홍보를 확대해 나갈 예정임

## 2. 친환경농자재 포함 농기자재 수출농업 추진단 키포프 출범

### - 6개 연관산업 수출통계 분기별 관리, 분야별 수출 확대 정책 제안 등 -

▶ 2017.1.18(수)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농식품부, 협회, 수출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하는 '수출농업 추진단'을 발족하고, 전문가그룹이 사전 연구한 연관산업 수출 확대방안, 연관산업의 수출통계 정비 방안,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을 논의하였음.

<주요 논의 결과 및 향후 계획>

**(수출 통계 관리)** 정책지원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각 협회를 통해 6개분야 (농기계, 농약, 비료,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약품) 수출통계 통합 관리 지원. 농기자재팀에서 '17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농기자재 수출빅데이터 정보지원과 연계. HS코드 분류 불가능 분야(농약, 친환경농자재, 동물약품)는 협회에서 업체들이 DB에 수출실적을 입력토록 유도(**DB등록 업체에 한해 수출 지원**).

**(정책 제안)** 분야별로 각 협회가 ① 산업현황, ② 역점 수출추진방향, ③ 정책건의 등을 업계로부터 수렴(~2.3)하여 제안. 분야별로 부내 담당부서, 협회, 전문가를 매칭 업계에서 제안 사항을 검토, 분야별 수출 확대방안 마련(~2월말)

### 3. 2017년도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기농업자재 관리계획

#### -공시제통합 세부기준마련, 사후관리강화, 전문성제고, 자문기구설립

(제도개선) 공시.품질인증을 “공시제로”로 통합 세부기준 마련  
공시품에 효과 및 성분함량을 표시하지 못함에 따라 농업인 사용불편에 따라 공시제로 통합 품질인증제를 폐지하는 대신 효과표시 자율보증제 도입하는 세부시행안 마련

(품질 제고) 유기농자재 부적합품 생산.유통 차단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생산단계 : 생산.수입. 판매실적있는 제품 전수조사위해 중점 판매시기에 과거 부적합품 생산업체 및 미생물 자재업체 집중조사

-유통단계 : 지역 인증농산물 출하시기별 시판제품 조사

(전문성 제고) 공시.시험연구기관 점검, 심사원 등 역량강화 교육 실시

공시기관 갱신심사(3개소) 및 하반기 점검(10월),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시기관 심사원 양성 및 보수교육(5월) 등

(제도 자문기구 설립.운영) 인증제 및 유기농업자재 등

-인적구성원칙 : 정부, 생산.소비자, 대학소속 유기농 전문가

-자문분야 : 주요 인증기준 제.개정 및 허용물질 신규 허용.폐지 등 자문

### 4. 2017년도 농촌진흥청의 유기농업 연구계획

#### - 유기농 현장 해결을 위한 유기농농산물 생산기술, 토양관리기술 개발-

○ 유기농 현장 해결을 위한 유기농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부산물 활용 유기농 병해충 관리기술 개발 및 실용화: 고추탄저병 억제 및 콩 톱다리 개미허리노린재 억제기술, 유기농 오이, 호박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개발

○ 저투입 자원순환형 유기농업생산시스템 및 유기농 종합관리기술 현장실증

○ 유기농업 종합 종자생산기술 개발

○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존 효과검증 및 증진방안 연구

○ 유기과수 재배 매뉴얼 및 농가사례집 및 유기과수 신기술 시범사업 신규추진

○ 유기농업 확산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강화 등

### 5. 국회서 친환경 과일 학교급식 공급문제 토론회

#### -저농약 과일농가 '전멸 위기'한달 9천만원 수익이 2천만원 올상-

▶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사과 없는 친환경급식 대안토론회'(식량닷컴 주최)에 친환경과수농가, 공무원.영양교사가 참여, 학교급식 친환경과일 공급문제를 토론했다.

-전친농 박종서 사무총장은 “친환경 과일, 특히 유기농 배의 품위에 대해 각 학교들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유기농 배가 반품처리당하는 사례도 많다.”

▶영양교사 김우경 씨는 "1주일 2~3회 급식에 과일을 제공하는데, 친환경 과일은 단가가 높아 친환경과일 사용권장비율(70%)을 지키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장수 사과농가는"저농약 인증 폐지 후 유기과수 재배가 어려워 전멸 상태다. 노지 과일은 당분이 높아 병해충 피해가 많아 하우스 재배에 비해 몇 배나 어렵다." 저농약 폐지로 기존 저농약 인증 농가의 90%가 제초제를 써 토양오염 되는가 하면 한 달 9천만원 수익이 2천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울상 지었다.

## 6. 2017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가꾸기사업'

-3월 31일까지 서울시는 '2017 함께서울 친환경농장가꾸기' 참여시민모집-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서울시는 '2017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가꾸기' 참여시민을 모집해, 4월부터11월까지 유기농 체험농장을 운영할 예정임. 함께서울 친환경농장은 경기도 팔당 상수원의 수질 보호 및 친환경 농사 체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민들이 팔당 상수원지역에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경작을 지원하는 친환경 주말농장임.

## 7. 경기도 친환경농업예산 600억 확보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에 456억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에 50억원-

경기도가 올 농정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2% 늘어난 5810억원을 확보. 이는 지난해보다 618억원 늘어난 액수다. ▲농업·농촌분야 4258억원 ▲임업·산촌 852억원 ▲해양수산·어촌 387억 등. 이중 57%인 3313억원이 NEXT 경기농정 관련사업 94개에 편성. NEXT농정은 농가소득을 2020년까지 5천만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도 농정비전▲안심먹거리 제공 ▲다 Farm플랫폼 구축 ▲농가소득 향상 등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에 456억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에 50억원, 수출물류비 23억원. 수출단지 시설현대화 15억원 등 수출확대 지원을 확대

## 8. 강원도, 친환경유통 활성화·유기자재지원 등 569억원 투입

-친환경 농자재 구매비 12억원▲유기질 비료 29만6000톤 지원-

강원도는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충과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친환경농자재 지원 등 16개 사업에 569억원을 투자한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3개소, 자율 실천단지 13개소 지원 ▲미생물 제제 등 친환경 농자재 구매비 12억원▲유기질 비료 29만6000톤 지원▲그외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건당 50만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금도 17억원 지원하되 ha당 단가는 유기농 밭은 120만원, 논 60만원이며 무농약은 밭 100만원, 논 40만원임.

## ◎ 농정소식

### 1. 농림축산분야 첫 합동 업무계획 발표회...절반의 성공



농림축산분야 첫 합동 업무계획 발표회가 농식품부 산하 20개 기관이 지난 25일 한낱한시에 모두 참여하고 농민·소비자단체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까지 참석했다는 점에서 최초의 시도다. 기존 장관 업무보고 틀을 깨고 농업계 20개 기관이 기관 간 담당업무를 공유했다. '쌀 수급안정 및 직불제 개편방안 정책'과 'AI 개선대책' 토론회는 청중들의 공감을 사지 못하고 농산물값 보장대책 제시가 미흡했다는 단체들의 지적도 있었지만 첫 행사에 의의를 둔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 받았다.

### 2. 1월 임시국회 마무리, 농해수위 소관 법률 없어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20일)에 상정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전무했다. 검정을 받지 않는 농업기계의 판매·유통을 금지하는 농업기계화촉진법개정안 등은 국회 법사위로 회부, 추후심사될 예정이다.

### 3.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전농·전여농 제주도연맹과 지난 24일 서귀포시 예술의전당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위 의원은 "농산물 가격안정을 제도적 뒷받침해 농가 소득안전망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농은 가격이 널뛰기 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길 바란다. 전여농은 농산물 국가수매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념름소장은 생산비 반영 최저가격, 그 이하 떨어지면 정부 지원토록 해야 한다. 토론자들은 "최소한 생활유지가 가능한 최저가격이 도입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4. 김영란법 개정방안 마련 착수...황교안 대행 검토지시 허용가액 상향·농축산물 제외...“설 소비동향 피해 실태 지켜보고 결정”

### 4. 안성시, 배화상병 확진 1만2천그루 매몰



경기 안성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4일 서운면의 한 배과원에서 나뭇가지가 검게 말라죽는 화상병 신고가 접수돼 화상병으로 확진판정을 받았다. 안성농기센터는 반경 100m내 과원 3곳, 총면적 1.2ha, 1만2천그루에 대한 매몰작업을 실시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 장미속 180여종에 이르는 식물의 잎·꽃·가지·과일에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그을린 자국이 나타나는 병이다. 감염 되면 급속도로 나무가 말라 죽기 때문에 과수 수확 후부터 신초 및 꽃 발아 전까지 약제처리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 5. 제주도, 올해 감귤산업에 1018억 투자 ; 노지감귤 산지 전자경매·풋귤 산업화 박차...가격 안정·재해예방 중점



제주도는 올해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확대 및 유통구조 혁신을 통한 가격안정과 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1018억원을 투자한다. 작년 첫 도입된 노지감귤 산지 전자경매를 본격화해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대형거래처 중도매인 참여를 100여명으로 확대해 경매 물량을 2만톤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 노지감귤 외 비가림 감귤, 하우스 감귤, 만감류를 경매대상에 포함 도비 10억을 투입 포장상자 및 배송료를 지원한다. 도는 타이백 재배와 이랑재배 사업을 확대해 당도 중심의 감귤 생산으로 변화, 소포장 출하 확대,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온풍난방기 지원 등 재해예방, 수출물류비 및 판촉경비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한다.

### ◎ 농자재 소식

#### 1. 농기자재업체 "생산비절감 책임 떠맡나"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 생산비절감방안에 농자재가격 2천5백억 절감방안 포함-**

- 농협중앙회가 농가소득 5천만원 실현 핵심추진전략으로 생산비용 절감을 내세우면서 농기자재가격인하압박에 농기자재업체가 우려. 농협은 2017년 업무계획을 통해 2020년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실천방안으로 생산비 절감, 농산물 판매확대, 부가가치 제고 등을 5천만원 달성을 위한 핵심추진전략으로 발표.
- 이중 생산비 절감방안에는 2020년까지 농약, 비료, 시설자재, 농기계 등에서 2500억원 가격을 인하해 농가경영비를 절감할 계획임. 실제로 농협은 2017년 농자재 가격 인하로 농가부담 2550억원을 줄일 방침임. 농협경제지주는 올해 2015년보다 화학비료 1170억원, 농약 100억원, 시설자재.농기계가격은 각각 25억원씩 절감하고, 자재유통센터 건립 등을 통해 20억원 절감할 예정임.
- 농가소득 정체로 생산비 절감이 중요하나 농협이 근시안적 성과주의에 매몰돼 생산비 절감의 책임을 농기자재업체에 전가할 경우 중장기적 국산농기자재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며, 특히 값싼 수입품과 경쟁을 위해 가격이 아니라 품질이나 친환경생산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현재의 계통계약 시스템은 저가.저질경쟁만 부추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임.
- 농협이 생산비 절감을 강력 추진하면서 계통구매 참여 농기자재업체 어려움도 가중. "지역농협들이 추가약정을 통해 업체간 할인경쟁을 시키고 있는 것도 심각. 업체 입장에서는 1.4%대 중앙회 취급수수료, 5%대 지역 농협 판매수수료는



그대로 둔 채 제조업체에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협동조합연구소장 등 전문가들은 “현 방식을 고수할 경우 결국 품질이 낮은 농자재 유통을 부추기고, 궁극적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임. 제살 뜯어먹기식 계약방식이 단기로 가격경쟁에 유리할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장불균형을 초래, 우리농업의 생존방식은 가격이 아닌 품질과 친환경 생산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런 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지적함(1.17일자 한국농어민신문)

## 2. 글리포세이트, 다이아지논농약 물량제한 해제...선점업체 독과점 부작용이 있는 물량 제한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제56차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에서 물량제한을 해제했다. 발암추정 농약으로 재평가를 추진한 농약은 글리포세이트, 다이아지논, 말라티온이다. 글리포세이트는 WHO/FAO 농약잔류전문가 합동회의에서 비발암성 물질로 분류됐고 국내 농작업자 노출량측정시험 결과를 받아 재평가 결과 결론냈다. 다국적기업 바이엘이 동품목을 인수하면서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 다이아지논은 재평가에 WHO/FAO 농약잔류전문가 합동회의에서 비발암성 물질로 분류된 검토 결과가 반영. 말라티온은 자료 미제출로 12월 등록취소됨.
- 정말 안전한 수준이라면 언제까지 선진외국 검토결과에 의존할 것인가. 현재 외국에서 문제된 품목은 없는가. 향후 선점회사만 독과점 부작용이 있는 물량 제한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문제 있으면 취소하고 우려되면 등록 유예함이 옳다.

## 3. 세계 생물비료 시장 지속적으로 성장

-지난해 시장규모 15억달러...2018년 17억9천만달러 전망-



출처 : MARKETLINE, Global Biotechnology(2015.2)

세계 생물비료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동향 분석사인 BBC리서치는 전세계 생물비료 시장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시장규모는 약 15억달러로 2010년 11억달러보다 37% 늘고, 2018년에는 18억달러로 성장 전망했다. 생물비료란 작물증산,지력유지효과 유용미생물 활용 유기자재, 광물, 그 혼합물을 첨가한 제품이다.

종류는 질소고정 생물비료가 77%, 인산가용화 생물비료 15%, 기타 8% 순임.

국가별로는 미국의 경우 생물비료 시장 수익만도 약 2억달러 이상 예상됨. 일본은 유기물과 토양개량제 중심으로 비료 시장이 활성화되어, 특히 지력증진법이 토양미생물제재를 토양개량제로서 품질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생물비료 시장은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 침체와는 대조적임

중국은 친환경 농자재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정부가 생물비료 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데 힘입어 생물비료 시장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이처럼 생물비료 시장이 크게 확대되는 것은 안전한 먹거리 수요 증가와 환경에 대한 인식 확산, 미생물 연구개발 활성화가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음(1.16 농민신문)

#### 4. 당회 유기질비료단체등록표준을 신단체표준으로 변경예정

중소기업중앙회 신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 오픈으로 당회 유박 유기질비료 단체 표준을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운영요령”에 의거 신단체표준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 유기질비료가 '기타비료 및 질소화합물(CAS번호 20209)'로 분류되던 것이 2017년부터 '유기질비료 및 상토제조업(CAS 20313)'로 분류하는 것으로 개정 고시됐다. 그동안 유기질비료업체는 화학물질로 분류되어 주기적으로 종사자의 특수건강검진 및 산업 안전측정 등 규제를 받아 왔다.

#### ※ 2017 CAC 당회소속 회원사 다수참가 예정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킨텍스가 후원한 2017 CAC한국관에 당회 15개 회원사가 참여할 계획이다. 당회 건의에 의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관이 설치 운영 B2B미팅도 진행된다 \* 전야제는 2월 28일 저녁이고, 전시는 3.1일 부터 3.3일까지다.

#### ◎ 제9회 한친농 정기총회 참석요망

1. 일시 및 장소 : '17.2.10. 14:00~17:00, 서울 aT센터 3층 세계로룸

#### 2. 행사 일정

○정기총회 발표 : 14:00~14:40

○세미나 발표 : 15:00~16:20

가. 친환경농업 및 유기농자재 정책방향(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나. 친환경비료 품질관리정책방향(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장)

다. 친환경농자재 수출시장동향 및 지원정책(한친농 안인 박사)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16:20~17:00